

댓글부대로 국민의 참정권을 훔쳐가는 도둑이 나타났습니다

2012년 12월 늦은 밤, 우리는 오피스텔 한구석에서 국가정보기관의 공무원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참정권을 농락하기 위해 열심히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던 영화에서나 볼 수 있던 사건이 대한민국 서울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경찰은 오피스텔 문을 두드리며 댓글조작 부정선거 범죄자를 잡으려 하고 어둠속에서 국민의 여론을 조작하던 국가정보원 공무원은 필사적으로 문을 잠그고 있는 참담하면서도 창피했던 대한민국 정치의 흑역사였습니다.

검찰, 경찰, 국정원 등 내로라하는 국가권력과 당시 여당이 나서 이 사건을 무마하려고 노력했지만 잠시 눈을 속여 당선되었던 대통령은 ‘비선실세 국정농단’에 연루되어 헌정사 최초로 탄핵과 20년 징역형이라는 사법부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고 국가정보기관의 수장과 관련자들 역시 엄중한 형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바로 어제 한 언론보도를 보고 13년 전 사용되었던 대선을 앞둔 조직적 댓글달기수법의 여론조작 선거부정이 또 다시 서울 종로 한복판에서 리박스쿨이라는 한 극우단체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번에는말로 국민들과 함께 엄정한 회초리를 들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동원된 ‘자손군’이라는 댓글달기 조직원들에게는 현금 대신 국가가 어린새싹들의 교육을 위해 국민의 혈세 1조8천억으로 마련한 방과후 늘봄교실이 활용되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자손군 댓글달기 조직원들에게는 댓글조작의 대가로 시급 4만원의 ‘늘봄프로그램 강사’로 취업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창의체험활동지도사1급’ 자격증이 배포된 의혹도 발견되었습니다.

더구나 서울교대와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이미 많은 초등학교에 강사가 투입되었다고 하는바, 이 과정에서 부정이나 특혜가 있었는지 철저하게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심지어 이 댓글달기 조직원 중 일부에게는 리박스쿨로부터 기본적인 교육도 다 종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학금이라는 명목 하에 늘봄프로그램 강사 선발에 필요한 자격증이 주어졌는데, 이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교육부는 눈을 감고 방치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평범한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또한 극우세력의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는 전광훈 목사의 며느리인 양 모씨의 경우도 리박스쿨 강사로 활동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일 이 과정에서 특혜나 부정이 대가로 지급되었다면 이는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제7호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이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 뿐이겠습니까? 이 단체를 이끌고 있는 손 모씨는 김문수 후보와의 친분에 대해 “김 후보가 예전에 이 사무실에 온 적도 있고 이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잘 알고 있다” 라고 스스럼없이 이야기 하였습니다

허위뉴스, 댓글조작 등으로 국민여론을 호도시킨 이 단체에는 과거 국정원 알파팀장이었던 이 모씨가 연루되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는데, 이 모씨는 국정원 근무 시에 여론전문가로 20대 대선은 물론 이번 대선에서도 김문수 후보를 돕고 있다는 제보도 있는바, 김문수 후보께서는 리박스쿨과 전 국정원 알파팀장 이모씨, 김문수 후보 캠프와의 관련성에 대해서 명확히 밝히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단체의 대표 손 모씨는 대선후보 TV토론이 진행되던 시간에 댓글조작 조직원 160여명이 가입된 단체 대화방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악플을 달라고 지시하며 구체적인 방법, 댓글 예시까지 알려 주었고 어떤 방송사의 댓글 창에 댓글을 달라는 구체적인 행동요령까지 지령하였습니다.

리박스쿨의 대표 손모씨는 윤석열 정권에서 이주호 교육부장관의 교육정책자문위원이라는 직책을 가졌던바 이 역시 윤석열 정권과 대표 손모씨와의 깊은 연관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댓글조작 단체는 심지어 지난 5월 27일 대선 선거운동이 한창 진행되던 시기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의 주선으로 국회에서 학부모도 아닌 댓글조직원을 ‘바른교육을 원하는 학부모시민단체 연대’로 위장시켜 이재명 후보의 교육정책에 대한 비판 행사도 가졌습니다.

이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참석하여 극우종교집회를 주도한 세이브코리아를 운운하며 경제적지원에 대한 걱정도 하였고 김상훈 의원도 참석하여 격려하였습니다.

이정도면 국민의힘 그리고 김문수 후보의 캠프와 이 댓글조작 선거부정을 자행하고 있는 단체가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은 충분히 의심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정선거”를 전가의 보도처럼 입에 달고 무장한 군인을 선관위까지 침범시켰으며, 급기야 “부정선거”라는 말도 안 되는 핑계로 내란행위까지 정당성을 부여하려던 세력들이 “조직적 댓글작업을 통한 국민여론 조작”이라는 선거부정행위에 깊숙이 관련되어 있다는 의혹이 백일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이는 경찰관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라고 준 권총을 차고 남의 집에 들어가 강도행각을 한 후에 강도를 잡아야 한다고 부르짖으며 자신의 범죄를 감추고 국민의 혈세를 월급으로 받아가는 영화에서 볼 수 있는 극단적 장면과 무엇이 다르다는 말입니까?

지난번 대선 때 윤석열 후보가 날렸던 어퍼컷과 지금 김문수 후보가 오른손을 치켜들며 “하면 된다. 할 수 있다”라고 외치는 행동은 혹시 이들에게 진군가 정도로 들렸지 않았나? 하는 의심마저 듭니다.

어제 김문수 후보는 국민들에게 선거부정을 보면 이렇게 외쳐 달라고 목 놓아 부탁했습니다. “도둑이야... 도둑이야... 도둑이야”라고 말입니다.

헌정질서의 붕괴를 도모했던 내란은 그 내란으로 인하여 치러지는 조기대선이 3일 앞으로 다가 온 오늘 현시점에도 현재진행형으로 계속되고 있으며 이를 바로 잡아 국민께 돌려 드릴 수 있는 길은 정권교체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조직적 댓글달기 범죄수법의 여론조작 부정선거”라는 사실을 통해 또 한 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주호 권한대행에게 분명히 요구합니다. 공정한 대선관리를 하십시오. 당신이 권한대행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국가기관을 동원하여 3일남은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또 다시 헌정붕괴 세력에 의해 유린당하지 않도록 즉시 모든 조치를 하십시오.

우리는 이 ‘조직적 댓글작업을 통한 여론조작 선거부정’이 비단 어제 보도된 곳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자행되고 있다는 제보도 들었습니다.

만일 이 부정선거를 뿌리 뽑지 않는다면 이주호 권한대행도 헌정질서 붕괴범들과 공범이라는 무거운 멍에를 벗을 수 없다는 사실을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히 권고합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부정선거 행위가 더

이상 자행될 수 없도록 저희들과 함께 두 눈 부릅뜨고 감시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에게 6월 3일 대한민국 헌법질서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국민들과의 약속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2025년 5월 31일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신속대응단·공명선거법률지원단